

28. 2차대전 이후의 동아시아 ④

경제대국의 실현과 장기불황의 시작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2020s)
독습용 보조교재&과제

0. 시대연표

| | 중국 | 한반도 | 일본 | 사건 |
|------|-------------|----------------------------------|------------------|--|
| 1970 | 중화인민 공화국 | 대한민국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일본 (昭和) 시대 | 1968: 「프라하의 봄」(8), 「브레즈네프 독트린」과 중국의 소련비난(8), 일본의 대학분쟁, 「4대 공해소송」, 1969: 중·소 국경분쟁 1970: 오사카EXPO(3), 1971: 임표사건(9), 중화민국의 국제연합 탈퇴와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입(10), 스미 소니언 체제(11), 1972: 다나카 내각 발족(7), 닉슨의 중국방문, 중일수교(9), 오키나와 일본 반환 1973: 국제 공동변동환율제 채택(3), 제4차 중동전쟁(10), 1974: 제1차 오일쇼크(1), 다나카 내각 퇴진(11) 1975: 장개석 사망&장경국 계승, 1976: 주은래 사망(1), 「4.5운동」(4), 모택동 사망(9), 문혁4인방의 체포와 문혁의 종결(10), 1977: 등소평 복직(7) 1978: 제2차 오일쇼크 발생(10), 脫문혁과 「개혁개방」노선 선언(12), 1979: 미중수교, 중월전쟁 1980: 조자양 총리취임(8), 1981: 모택동과 문혁에 대한 부정적 공식평가(6), 1982: 집단지도체제 전환(주 석제→총서기제)(9), 호요방의 총서기 취임(9), 나카소네 내각 발족(11) |
| 1980 | | | | 1985: 인민공사 해체완료와 자유시장 부활(6), 플라자합의(9), 고르바초프 정권발족과 중·소 긴장완화, 1987: 장경국 사망&계엄해제(7), 나카소네 내각 퇴진(11), 「버블경기」 발생 1989: 소와 천황 사망(1), 호요방 사망(4), 고르바초프 북경 방문(5), 천안문사건(6), 조자양 실각과 강택민 총서기 취임(6), 「버블경기」하에서 주가 최고치 기록(12) |
| 1990 | | | | 1990: 일본증시의 주가폭락(1), 1991: 「버블 붕괴」(~93), 소련 붕괴(12), 1992: 한중수교(8) 1993: 55년체제 붕괴(8) 1997: 홍콩반환(7) |
| | | | 헤이세이 (平成) | |

1. 「닉슨 쇼크」와 중·일 국교정상화

• 변화하는 미일관계와 「닉슨 쇼크」Nixon Shock

- : 1960년대 후반의 미국경제...베트남전 부담+미 달러 신용도 하락으로 고난
- : 반면 서독과 일본은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무역흑자 지속
- 미국의 불만(+사토의 섬유제품 수출 자주규제 약속의 미이행)
- : 닉슨의 대통령 취임¹⁹⁶⁹과 그 정치적 과제→경제재건, 베트남전 종식
- 중국과의 관계 개선선언¹⁹⁷¹+중국방문¹⁹⁷²
- 서독과 일본에게 환율인상 압력
- : 외교·경제 양면에서 변화된 미국의 태도→일본의 충격 (닉슨 쇼크)
- 경제 면에서 미일관계는 종속에서 경쟁관계로 변화

•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내각^{1972~74}과 중일 국교정상화

- : 사토의 사임 이후 벌어진 총리직 쟁탈전→다나카의 승리
- : 취임 직후의 중국방문과 「중일 공동성명」 발표
- 일본이 인정하는 유일한 중국의 합법정부=중화인민공화국
- 대만 중화민국과의 외교단절

2. 「오일 쇼크」와 고도경제성장의 종결

-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식

- : 선진 10개국 재무장관 회의의 개최¹⁹⁷¹

- 고정환율제 유지, 무역흑자국(서독·일본 등)의 통화가치 인상 결정

- 「스미소니언 체제」의 등장

- but 이후에도 무역불균형은 지속

- : 결국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공동)변동환율제로 이행¹⁹⁷³

- 다나카 내각과 「일본열도 개조론」

- : 고도성장의 소외지역, 인구 과소지역에도 성장의 열매를 분배하자는 정책

- 태평양 연안에 집중된 공업지대를 일본 전역으로 분산

- 신칸센과 고속도로 확충으로 이를 상호 연결

- : 고도성장의 지속을 기본적 전제로 함

- 변화하는 국제 경제질서와 부조화

- 다나카는 내정으로 성장한 인물(외교X)

2. 「오일 쇼크」와 고도경제성장의 종결

- 「오일 쇼크」와 고도경제성장의 종결

- : 제4차 중동전쟁 발발¹⁹⁷³과 자원의 외교무기化→석유 가격 급등

- : 일본의 불운...대규모 금융완화 실시 직후의 유가 폭등

- 「광란물가」...73~74년 일본의 기록적 인플레이션

- 전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 고도경제성장의 끝

- : 1975년 내내 세계적으로 불황이 지속

- 대책 마련을 위해 6개국(미·영·프·서독·일본·이탈리아) 정상회담 개최

- 「선진국 수뇌회의」(G6)의 시작과 정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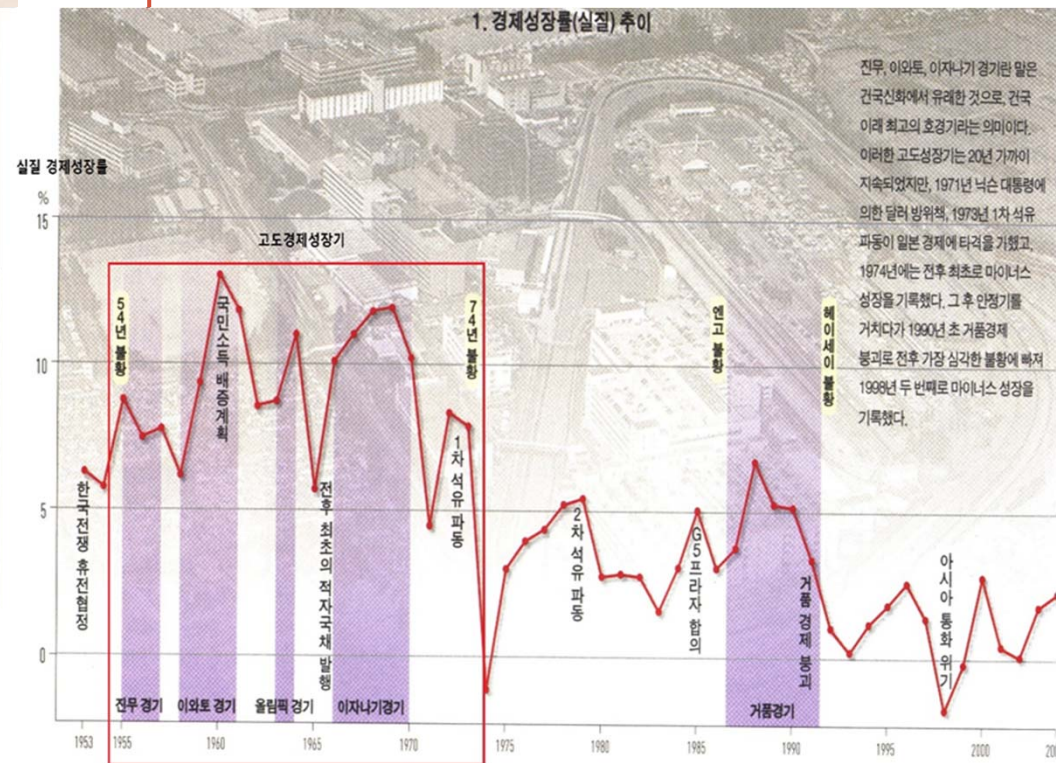
- cf. 1976년 캐나다 가세(=G7)

2. 「오일 쇼크」와 고도경제성장의 종결: 참고도판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경제성장률의 추이 (고도성장기 이후의 추이를 볼 것)



3. 1970~80년대의 일본정치

- 다나카 내각 퇴진과 이후의 정국

- : 세계적 불황과 국내의 인플레이션→지지율 급락, 자민당 총선 패배¹⁹⁷⁴
→뇌물수수 의혹이 겹치며 퇴진

- : 증동·석유문제에 무관심(only미국의존)

- : 「일본열도 개조론」과 초거대 예산편성을 고집...인플레이션 증폭
→1960년대 내정 위주의 정치에 대한 집착이 퇴진의 근본적 원인

- : 이후 다나카의 옛 라이벌들이 돌아가며 집권(평균 2년씩 재임)

- : 미키 다케오→후쿠다 다케오→오히라 마사요시→스즈키 젠코

-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내각^{1982~87}과 신자유주의

- : 80년대 일본정치를 대표하는 보수(+우파)정치가. 신자유주의 신봉자

- : 기존 자민당 정치의 대대적 개혁을 주장...「전후 정치의 종결산」

- : 전두환 정권과의 관계개선과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

- : 미국 레이건 정권, 영국 대처 정권과 긴밀한 외교관계 구축(모두 신자유주의 정권)
→당시의 경제번영과 맞물려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임

3. 1970~80년대의 일본정치

- 나카소네 야스히로 中曾根康弘 내각^{1982~87}과 신자유주의 (계속)
 - : 「작은 정부」 실현과 행정 · 세제 · 교육 개혁
 - 방만경영으로 지탄 받던 국영기업들의 민영화가 대표적^{1985~}
 - ex. 전신전화공사→NTT, 전매공사→JT, 국철→JR
 - :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실시 배경
 - 사토 내각 이래 확대일로에 있던 사회복지 예산의 부담
 - 오일쇼크와 불황 타개를 위한 국채의 남발과 그 재정부담
 - s0 긴축재정 실시와 국채 상환으로 재정 건전화 시도
 - : 1986년 총선거 대승 but 대규모 간접세 신설을 시도하다 위기에 직면
 - 퇴진. 간접세는 후임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에서 「소비세」로 실현

4.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일본경제

• 제1차 오일쇼크_{1973~74}와 일본경제의 대응

: 다나카 내각 퇴진 이후에도 지속된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불황)

→미키 내각의 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국가주도의 관민일체형)

→기업들의 「감량경영」(=인원정리)

: 고도성장기 종신고용신화의 붕괴와 노동자층의 보수화

: 「단신부임」·「과로사」라는 용어의 사회적 유행

: 선진국 중 가장 신속한 오일쇼크 탈출 but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확립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의 개막

• 제2차 오일쇼크_{1978~80}와 일본경제의 대응

: 이란 혁명₁₉₇₈과 이란·이라크 전쟁₁₉₈₀

: 여전한 노동계의 침체와 기업들의 고강도 경영합리화 추진

→컴퓨터와 산업로봇을 이용한 사무자동화로 인력 절감

cf. 제1차 오일쇼크 시에는 조기퇴직으로 인력 절감

4.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일본경제

- 제2차 오일쇼크^{1978~80}와 일본경제의 대응 (계속)
 - : 반도체와 집적회로(IC) 등 세계최고 수준의 하이테크 산업의 존재
 - 컴퓨터 · 산업로봇 산업의 실현
 - 일본의 새로운 인기 수출상품으로 부상(+전통적인 자동차 · 전기기계)
 - 제2차 오일쇼크 탈출의 원동력
 - 1980년대 중엽 일본의 세계적 경제대국化의 주역
 - : 그밖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들은 이 때에도 반복됨

5. 「경제대국」 일본의 흥망

- 「플라자 합의」 Plaza Accord와 일본의 과제
 - : 1980년대 전반에도 지속된 무역 불균형 문제
 -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시도
 - : G5(미·영·프·서독·일본)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1985 뉴욕
 - 달러 인하, 마르크&엔의 급격한 인상이 결정 (플라자 합의)
 - : 엔화가 종래 달러 당 240엔대에서 120엔대로 폭등
 - : 일본은 상호 모순되는 두 개의 과제에 직면
 - ①(엔화급등으로)경쟁력이 약화될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회복?
 - ②과제①이 실패할 경우, 수출을 대신할 새로운 성장 원동력은?
- 과제①의 해결: 수출경쟁력의 신속 회복과 「경제대국」 일본
 - : 반도체 등하이테크 산업에 주력, 이를 다른 산업의 매니지먼트에도 적용
 - 예상보다 빠른 수출경쟁력의 회복
 - : 엔화폭등으로 높아진 상품가격에도 일본산 제품들이 시장 석권
 - 대량의 외화 유입
 - 일본의 「경제대국」化

5. 「경제대국」 일본의 흥망

- 과제②의 해결: 내수주도 경제로의 전환과 「버블거품경기」의 시작
 - : 엔화폭등→수출경쟁력 ↓ but 수입상품 · 원자재들의 가격도 ↓
 - 소비심리 ↑ →국내시장의 활성화
 - : 수출이 아닌 내수확대를 새로운 성장 원동력으로
 - : 일본정부도 동일한 결론
 -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금융완화 정책들을 실시
 - 내수위주의 기업들은 이 혜택과 함께 수입 원자재 폭락으로 막대한 이득
 - : 예상보다 빠른 수출위주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외화 쓸어담기)
 - 일본 내수시장에 막대한 양의 자금이 유통
 - 결국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유입
 - 「버블경기」 현상의 시작
- 「버블경기」의 붕괴와 장기불황의 시작
 - : 토지가와 주가의 투기적 상승이 시작¹⁹⁸⁷
 - 실물 적정가와는 너무 동떨어진 「거품」bubble과도 같은 가격상승
 - 「버블경기」

5. 「경제대국」 일본의 흥망

- 「버블경기」의 붕괴와 장기불황의 시작 (계속)
 - : 일본정부의 뒤늦은, 따라서 과격한 규제
 - 토지가 · 주가의 동시 급락¹⁹⁹¹ (=「버블 붕괴」)
 - 막차를 탄 기업 · 개인들의 궤멸적 손실
 - 무분별한 용자를 거둬들였던 금융기관들도 일거에 경영악화
 - 금융 핍박과 경제의 경색
 - 발생 30년이 되가는 현재에도 지속중인 일본 장기불황의 시작
- 버블 붕괴 이후의 일본
 - : 활력을 상실한 일본경제
 - 일본정부의 반복되는, 인위적 경기부양(국가채무 증가)
 - 그럼에도 불황은 지속 · 장기화
 - 실업률의 증가, 소득 양극화(=「격차사회」格差社會)

5. 「경제대국」 일본의 흥망

• 버블 붕괴 이후의 일본 (계속)

: 55년 체제의 붕괴¹⁹⁹³와 자민당의 야당 전략

→타 정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여 여당 복귀¹⁹⁹⁴

: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2001~06}의 등장

→자민당의 구습 혁파 주장, 강력한 구조개혁,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 운영

→but 이런 고이즈미의 인기 · 장기집권은 자민당의 체질강화로 이어지지X

: 고이즈미 퇴진 이후의 자민당 「단명 내각」들

→짚은 정권 교체로 인한 국정 마비, 자민당의 인기 폭락

: 총선거에서의 야당 민주당의 대승과 정권교체²⁰⁰⁹

→하토야마 내각의 발족

: 「동일본 대지진」^{東日本大震災}의 발생²⁰¹¹과 막대한 인명 · 경제 피해

→일본정부의 리더십 부재, 무기력한 대처

→일본의 미래에 대한 의문

→이는 자민당 재집권과 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하에서도 미해결 상태

나카소네 야스히로
(with 레이건, 대처)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의 TV 보도 화면)



6. 과제

Q.1 「개발독재」와 그 양면성에 관하여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동아시아를 풍미한 지배체제는 소위 「개발독재」라 불리는 것이었다. 정치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분리하여, 후자의 달성에 집중함으로써 전자의 결핍을 정당화하는 이 체제는, 세계적으로는 2차대전 직전의 권위주의 국가에서 쉽게 발견되지만, 아시아의 경우, 그 원형은 메이지 정부의 지배체제 형태에 있다. 여기에 2차대전 이후 일본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이 가미되어, 초보적 단계의 민주주의 의식 밖에 갖지 못했던 당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참조 모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군사정권이나 대만의 국민당은 모두 경제발전을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내세웠으며, 일본의 경우 민주주의 체제였으나 고도성장기 이후는 사실상 자민당 일당 지배 형태가 지속되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도 비록 그 지배사상은 사회주의이나, 공산당 일당 독재와 경제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개발독재」 국가들과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 이런 개발독재는 정치 민주화를 저해하고, 구성원 일부(esp. 특권층)에게만 각종 특혜가 돌아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권위주의 정권의 모든 단점 포함). 반대로, 몇몇 성공사례를 참조하여 말하자면, 비교적 신속한 경제발전(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경제적으로 운택해지는 것은 언제 실현될 지 모르는 이상론?)이 가능하며, 애당초 정치적 민주주의 의식이 약한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것만이 유일한 경제발전 모델이라는 현실론적 입장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 먼 과거의 중국적 조공/책봉체제를 대체한 근현대 동아시아의 공통 경험인 이러한 개발독재 체제를, 그렇다면 현재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긍정/부정 중 어느 한 편에 서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해 보시오. (언제나처럼 분량은 A4 1면)

6. 과제

Q.2 1980년대 후반 동아시아가 맞이한 변화들에 대하여

: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나, 1980년대 후반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그런데 세계적으로도 그렇다→냉전종결). 한국과 대만은 우연히도 동일한 1987년에 정치적 민주화가 시작되어, 기존의 경제발전에 더하여 정치 민주화로도 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반면 중국은 1989년의 천안문사건으로 유사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지만, 자신들의 개혁개방 노선을 지속한다는, 한국·대만과는 다른 정치적 선택을 했다. 한편으로 일본의 경우는 약간 시기가 늦지만, 1991년의 버블 붕괴로 고도성장기 이래의 경제적 번영을 상실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이처럼 80년대 후반을 전후하여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시기적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을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해 보시오. (분량은 Q.1과 동일)